

# 하림, 김상조식 재벌개혁 '첫 타깃'

### 편법승계·일감 몰아주기로 도마위... 공정위, 조사 예고

편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하림그룹이 김상조식 재벌개혁의 첫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기집업단에 포함된 하림은 김홍국(60) 하림그룹 회장의 편법승계 의혹이 도마에 오르면서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하림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김 회장의 장남 준영(26)씨가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원을 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또한 사실상 회사가 대납했다는 지적도 따라붙었다.

지난 8일 김태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 등을 보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느

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가 하림의 승계 지원과 사익 편취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2012년 준영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당시 한국썸앤패) 지분 100%를 물려받으면서 '올품→한국썸앤패→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올품은 준영씨를 대상으로 30%(연1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준영씨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준영씨는 유상감자를 통해 올품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준영씨가 지분을 물려받은 뒤 올품과 한국썸앤패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연 3000억~4000억원대로 성장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열사들이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 작업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림 측은 "2012년 당시 하림그룹 전체 자산은 3조5000억원으로 증권기업에 속한 만큼 지금 기준으로 5년 전 증여세를 바라보는 건 불합리하다"며 "증여세를 투명하게 신고했으며 유상감자도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복잡한 지배구조인 하림은 이달 말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권 강화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일홀딩스는 김 회장이 41.78%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대주주

로는 준영 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계열사 한국썸앤패(37.14%), 올품(7.46%) 등이 있다. 장남의 지분이 44.6%로, 김 회장보다 많다.

편법 증여 의혹에 관련해 김 회장은 "당시 증여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자체 검열을 해서 다 보고 해도 위법 사항은 없었다. 문제는 마치 증여세 100억원으로 10조원을 증여한 것처럼 논조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해서 왜곡하면 편법 증여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림이 커져서 그런 것 같다. 기업이 안 커졌으면 아무 말도 없었을 것. 증여와 관련해 당시 자산 규모를 봐야지 현재 자산 규모로 비교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증여하고 나서 회사가 성장 안 하면 합법, 성장하면 편법이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인재용 기자

## 롯데백 전주, '희망 家꾸기' 진행

### 노후된 싱크대 교체·여름이불세트·주방용품 등 전달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3일 롯데복지재단과 함께 우리사회 주거 취약계층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희망 家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희망 家꾸기' 프로젝트는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새롭게 고쳐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북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전주 완산구 서완산동 소재지로 거동이 불편하신 조모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순가

정이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사롯데 봉사단을 포함 약 10여명이 참여해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노후된 욕실과 싱크대를 교체해주고, 여름이불세트와 욕실 주방용품 등을 전달했다.

롯데백화점 박종구 점장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회 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6차 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전북농협과 전북6차산업지원센터, 전북6차산업인증사업자협의회는 지난 22일 농협세종통합센터에서 지역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구축과 6차 산업 제품의 원활한 유통·판로 확보 및 인증 사업자에 대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농협, 6차산업지원센터, 6차산업인증사업자협의회는 협약 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전북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6차산업지원센터 이현민 센터장은 "농협의 6차산업화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한 장마구니, 전북 농촌 6차 산업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북 농촌 6차 산업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차산업 제품이란 농촌에서 생산하는 1차 농산물을 식품이나 특산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하며 농식품부에서 인증한 6차 사업인증경영체나 마을경영체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폭염 속 '공기와의 사투'... 건설업계 '근심 가득'

### 정부, "무더위 휴식시간 등 권고뿐... 업체 손실 보상책은 외면"

1년 내내 '공기(工期)와의 전쟁'을 벌이는 건설업계가 올 여름 예고된 폭염에 근심을 키우고 있다.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공사기간을 보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달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지자체와 발주청은 건설현장마다 오후 2~5시 사이에 1시간 휴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무더위 휴

식시간(Heat break)' 공문을 보내고 있다. 실제 안전처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달 '2017년 발정부 폭염대책'을 발표하고 강력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교육·홍보와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홍보(물, 그늘, 휴식),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와 교육·홍보 사업을 대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휴식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기에 대해 업체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발주청에서는 폭염시 휴식을 '권고

할 뿐,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2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가항력의 사유란 곧 '천재지변'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주청에서는 물론, 시공사에서조차 해마다 강해지는 폭염을 천재지변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재용 기자

도내 공기업 관계자는 "장마로 인한 공사 지연, 겨울철 추위로 인한 콘크리트 타설 어려움 등을 겪은 시공사들은 발주청에 '중공기한 연기 요청'을 해 검토 후 공기를 연장해주고 있다"면서도 "지금껏 폭염은 이유로 공기 연장 요청을 해 온 시공사는 한 곳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 대표는 "휴식을 제공하라고만 통보하고 손실을 만회해주지 않으니 걱정"이라며 "공기를 맞추려 작업을 강행했다가 근로자들이 고열 등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재용 기자

## 대형마트·백화점 '갑질' 과징금 2배로 높인다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현행보다 2배 무거운 과징금을 받게 된다.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이 줄어들고 감경 기준도 까다로워져 실제 체감하는 제재 수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

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개정안은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55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71억원 규모, 총 55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타근린생활시

설과 남원시 주천면 소재 임야,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공장용지 등이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29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기사제보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